한국교회의 한국전쟁 인식과 역사적 반성

홍승표 (감리교신학대학교 외래교수)

1. 한국교회의 ‘한국전쟁’ 인식

1) 반공의 시대

1950년 발발한 한국전쟁은 해방이후 분단된 한민족간의 내전 성격으로 시작하였지만 이후 공산진영과 자유진영이 맞붙은 국제전으로 발전하였다. 이로 인해 20세기 후반 세계는 강고한 냉전체제를 구축했다. 따라서 휴전 이후 남한과 북한 모두 양 진영 최전선의 국가체제를 형성하였다. 남한의 경우 해방 정국에 나타난 중도파나 좌파는 완전히 몰락하고 우파가 권력을 장악¹⁾하였다. 우파가 내세운 반공 이데올로기는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신성불가침적 국가 이념이 되었고, 그것에 대한 도전은 국가전복이라는 반역행위²⁾로 여겨졌다.

해방직후 좌우분열기의 한국교회는 기본적으로 반공의 입장을 취했다. 한국전쟁이 일어난 다음날에 한국기독교연합회(현 NCKK)는 뉴욕의 국제선교협의회(International Missionary Council, IMC)와 국제문제교회위원회에 북한의 남침 사실을 알리고 미국 및 국제종교기구들의 긴급도움을 요청하여 세계교회협의회가 “한국 상황과 세계질서에 대한 성명”(Statement on the Korean Situation and World Order)³⁾을 발표할 수 있도록 견인한 바 있다. 한국전쟁 막바지엔 북진통일 기원대회가 개최 되었는데, 한국기독교연합회(총무 유호준) 주최로 인천과 청주, 광주 등지에서 열린 이 집회를 통해 한국교회의 휴전반대 입장을 세계교회와 미국 대통령 등에게 알리는 성명서를 발표⁴⁾하기도 했다.

한국전쟁으로 인해 남북한 양편에서 500만 명이 넘는 사상자를 냈으며, 한반도 전체가 초토화 되었다.⁵⁾ 전쟁기간 중 948개 처소의 교회당과 기독교 관련 시설이 피해를 당했다.⁶⁾ 1957년 발행된 『기독교연감』에 따르면 전쟁이 끝나지 않은 1952년 6월 25일 시점에 400여명의 목회자가 희생되었으며, 이와는 별도로 북한에서만 장로교 교역자

1) 손호철, “한국전쟁과 이데올로기 지형”,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편, 『한국전쟁과 남북한 사회의 구조적 변화』,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1, 11-13.

2) 최장집 외, “한국 사회의 정치 이데올로기”, 한국산업사회연구회 편, 『한국사회와 지배 이데올로기』, 녹두, 1991.

3) World Council of Churches, *Minutes and Reports of the Third Meeting of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WCC*, Toronto (Canada), July 9~15, 1950, 91-92. 이 성명과 함께 세계교회협의회 중앙위원회는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위로의 편지”와 세계교회들이 이용할 기도문을 작성했다. 한국기독교역사학회, 『한국기독교의 역사 Ⅲ』,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9, 60.

4) 한국기독교역사학회, 『한국기독교의 역사 Ⅲ』, 60.

5) 한국기독교역사학회 편, 『한국 기독교의 역사 Ⅲ』,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9, 53.

6) 전택부, 『한국교회발전사』, 대한기독교출판사, 1991, 307-313.

240명, 감리교 교역자 46명이 죽임을 당하거나 행방불명⁷⁾되었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전쟁의 폭력성과 파괴는 한국교회에 집단적 트라우마를 남겼다. 휴전 이후 한국교회는 더욱 강고한 반공 입장에 서서 북한을 적대하고 공산세력에 대한 박멸을 주장했다. 이러한 관점은 베트남 전쟁에 군인을 파병하는 데에도 적극적인 신앙적, 이념적 당위를 제공했다. NCKK의 “파월장병을 위한 전국기도회” 권고문은 “공산침략의 쓰라린 경험”을 가진 한국이 “지금 ... 반공전선 제일선”에 서 있다면서 베트남 참전에 의미를 부여했다.⁸⁾

2) ‘반공’에서 ‘승공’으로

한국기독교 연합지인 「기독교사상」에서도 수차례의 6.25전쟁 관련 기고에서 반공적 태도⁹⁾가 확인된다. 1975년 서회에서 개최된 한 좌담에서 전택부는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양립할 수 없다”고 말하며 “승공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남한 사회와 교회가 공산주의에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제대로 가르쳐야 하는데, 교과목에는 들어가 있지만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고 있다는 점¹⁰⁾이다. 승공을 말하고 있지만, 정작 공산주의 사상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은 전무한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이 엿보인다. 그런 현실은 더욱 맹목적인 반공을 강화하는 부작용을 낳게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1970년대의 승공 논리는 1984년 「기독교사상」 권두언에서 더욱 정교해지는데, 6.25와 같은 비인간화의 전쟁을 막기 위한 ‘평화운동’¹¹⁾을 강조하면서 초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불가항력적 현실 속에서 물리적인 힘만으로는 평화를 이룰 수 없으며, “자유와 평등이 보장된 정의구현의 사회, 인간이 인간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만 물리적인 힘을 능가 할 수 있는 힘의 확립이 가능”¹²⁾함을 강조하고 있다.

3)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모색

1988년 2월 29일 서울 연동교회에서 개최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KK) 제37회 총회에서는 총대들의 기립박수와 만장일치로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교회 선언”을 채택했다. 이 선언은 그동안 “반공 이데올로기, 공산정권 적개심, 이념을 달리 하는 동포를 저주한 죄를 범한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내용이었다. 이 선언에서 언급된 한국전쟁에 대한 해석과 평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7) 『기독교연감』, 대한기독교서회, 1957, 37-42. ; 민경배의 연구에서는 남한에서 피살 또는 납치당한 개신교 교역자는 장로교 177명, 감리교 44명, 성결교 11명, 성공회 6명 등으로 언급하고 있다.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 연세대출판부, 1993, 526.

8) “주여 같이하여 주소서”, 『교회연합신보』, 1966년 9월 4일자. ; 류대영, “베트남 전쟁에 대한 한국 개신교의 태도”,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21호, 2004, 80쪽에서 재인용.

9) 지명관, “6.25를 되새기면서”, 『기독교사상』, 1965년 6월호. ; “좌담 - 6.25 전란을 말한다”, 『기독교사상』, 1975년 6월호. ; 조만, “6.25전란을 되새기며”, 『기독교사상』, 1984년 6월호.

10) “좌담 - 6.25 전란을 말한다”, 『기독교사상』, 1975년 6월호, 72.

11) 무력에 의한 전쟁억제에 경도된 평화운동의 한계가 있다.

12) 조만, “6.25전란을 되새기며”, 『기독교사상』, 1984년 6월호, 9.

1950년 6월 25일에 일어난 한국전쟁은 동족상잔의 비극을 낳았으며, 국제적 강등은 극대화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에 유럽 전 지역에 투하된 폭탄보다 더 많은 양의 폭탄이 투하되어 한반도는 초토화되었다. 이 전쟁에서 남한군 22만 명, 북한군 60여만 명, 중공군 1백만 명, 미군 14만 명, 유엔군 1만 6천여 명의 사상자가 났으며, 전쟁 중에 병으로 사망한 숫자를 포함하면 2백 50만 명이나 되는 군인들이 희생되었다. 남한 50만과 북한 3백만의 민간인 사망자를 합치면 6백만의 피가 이 땅에 쏟아진 것이다.(브리테니카 백과사전 1970년도 판 통계임) 그리고 3백만 명의 피난민과 2천만 명의 이산가족이 생겼다.

6.25를 전후하여 북한공산정권과 대립했던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은 수난과 죽음을 겪어야 했으며, 수십만의 북한 그리스도인들이 고향과 교회를 버리고 남한으로 내려와 피난생활을 감내해야 했다. 한국전쟁 동안 적지 않은 남한의 그리스도인들이 납치되었고, 참혹하게 처형되기도 했다. 한편 공산주의 동조자들은 이념전쟁의 제물이 되었고 ‘부역자’라는 명목으로 사회에서 매장을 당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전쟁으로 초토화된 한반도는 계속해서 동서냉전체제의 국제정치적 갈등과 반목에 휘말렸으며, 이에 따라 남북 간의 군비경쟁과 상호불신, 상호비방과 적대감 정도 점차로 증가되어 왔다. 한반도의 평화는 파괴되었고 민족의 화해도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다.¹³⁾

그리고 이러한 한국전쟁의 역사적 과오와 폐해에 대해 참회하며 다음과 같이 “한국전쟁에 대한 죄책고백”을 진술하고 있다.

1. 한국민족의 분단은 세계 초강대국들의 동서 냉전체제의 대립이 빚은 구조적 죄악의 결과이며, 남북한 사회 내부의 구조악의 원인이 되어 왔다. 분단으로 인하여 우리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마 22:37-40)을 어기는 죄를 범해왔다.

우리는 갈라진 조국 때문에 같은 피를 나눈 동족을 미워하고 속이고 살인하였고, 그 죄악을 정치와 이념의 이름으로 오히려 정당화하는 이중의 죄를 범해왔다. 분단은 전쟁을 낳았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쟁방지의 명목으로 최강최신의 무기로 재무장하고 병력과 군비를 강화하는 것을 찬동하는 죄(시 33:16-20, 44:6-7)를 범했다.¹⁴⁾

이러한 한국전쟁 인식의 대전환은 이후 한국교회 통일운동의 새로운 물꼬를 텃으며, 향후 남북관계의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정신적 토대를 제공했다. 그러나 NCKK의 한

13)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교회 선언”, 1988년 2월, 3-4.

14)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교회 선언”, 5.

국전쟁과 분단에 대한 역사인식의 전환에 동의하지 않는 세력을 중심으로 1989년 4월 한국기독교총연합(한기총)이 설립되었고, 그들은 기존의 반공 이데올로기를 그대로 답습¹⁵⁾했다.

최근 「기독교사상」에서는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특집을 기획하면서 권두언에 그동안 한국교회에서 소수의 목소리에 불과했던 퀘이커나 메노나이트, 함석헌과 같은 기독교 평화주의 전통에 대한 재조명과 관심을 피력했다. 아직도 정전상태인 한반도에서 전쟁의 역사적 종결을 위해서는 시민사회와 종교계의 전향적인 ‘평화운동’이 필요함을 강조¹⁶⁾하고 있다.

2. 한국전쟁으로 형성된 한국교회의 정체성과 역사적 반성

1) 반공주의

한국 개신교의 반공적 정체성은 1920년대 일제강점기부터 좌익세력의 반기독교운동의 경험 속에서 태동, 발전하였으며, 해방과 분단을 거치며 강력한 반공의식을 지닌 월남 그리스도인들이 남한교회에 유입 정착하는 과정에서 공산주의를 반민족적이고 비국민적인 ‘사탄’과 동일하다는 의식을 공유하고 교조화 했다. 또 기독교의 반공 노선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와 기독교적 가치를 일체화해야 함을 주장하며 기독교적 국가건설을 주장¹⁷⁾하였다. 이러한 반공주의는 한국전쟁의 경험을 통해 확고불변하는 신앙적 차원의 지배 이데올로기로 자리매김했다. 문제는 이러한 공산주의·사회주의에 대한 공포와 결합된 본능적인 혐오와 적대의 정서는 이후 한국교회와 사회 속에서의 소수의 목소리나 다양성을 용인하지 않는 폭력성과 억압기제로 작동하기 시작했다. ‘빨갱이’로 언표된 차별의 언어는 또 다른 차별을 합리화하고 확대재생산하는 근거이자 메카니즘이 되었다. 오늘 한국교회에 만연한 반공주의와 혐오, 적대의 정서를 그리스도의 복음과 열린 신앙을 통해 극복해야 할 역사적 책임과 과제가 남아 있다.

2) 물신주의

김홍수는 그의 저서 『한국전쟁과 기복신앙확산 연구』에서 “전쟁은 한국인들로 하여금 생존동기를 그들의 행동과 사유의 가장 근본적인 근거로 삼도록 했으며, 신앙생활에서는 그러한 생존동기를 충족시켜 주는 기독교 신앙의 현세 복락적인 요소들이 강화되었다”¹⁸⁾고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현세 복락적 기독교신앙의 정체성 부각은 1960년대 이후 산업화와 경제성장의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는 시대상황 속에서 더욱 고착화 되

15) 허호익, “남남 갈등과 통합적 통일신학의 모색”, 「한국기독교신학논총」, 제42호, 2015, 174.

16) 김홍수, “평화주의 불모지 한국교회”, 「기독교사상」, 2020년 6월, 5.

17) 1945년 11월 조선기독교 남부대회에서 이승만, 김구, 김규식이 참석하여 기독교 정신 위에 새로운 나라의 건설을 주장했는데, 새 나라의 정신적 기초는 반드시 기독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기독교를 건국의 정신적 기초로 삼을 것을 주장했다. 김권정, “해방 후 기독교 세력의 동향과 국가 건설 운동”, 「승실사학」, 제29호, 2012, 217.

18) 김홍수, 『한국전쟁과 기복신앙확산 연구』,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9, 199.

었다.

특히 한국전쟁의 트라우마는 정치적 측면에서 반공주의, 경제적 측면에서 기복신앙(물신주의)과 결합해 강력한 화학반응을 일으켰다. 이로 인해 한국교회는 반공주의와 성장주의로 무장된 메가 처치로 성장할 수 있었고, 이는 기독교의 근본정신과 토대를 위협하는 물신숭배로 이어졌다.

3) 숭미(친미)주의

한국전쟁 이후 국제적인 관계에서 한국의 경제는 미국에 철저히 의존하면서 자립적 발전의 길이 점점 봉쇄되고 종속적 발전의 가능성만 남게 되었고, 문화적으로도 ‘한국의 은인’이며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을 추종하면서 서양문화, 특히 미국 문화가 여과 없이 밀려들어왔다.¹⁹⁾

강인철은 “친미주의의 ‘대중화’가 급진전 되고, 식민지 엘리트층의 반쪽 친미주의가 ‘온전한 친미주의’로 바뀌었던 결정적 계기는 한국전쟁”이었으며, “미국에 부착된 반공주의-발전주의-민주주의의 아이콘이라는 이미지는 전쟁을 거치면서 더욱 강고해졌다”²⁰⁾고 분석했다.

4) 정교유착

한국교회는 교회와 국가 관계에 있어서도 이승만 정부와 긴밀한 밀착과 긴장관계를 형성했다. 1952년 실시된 제2대 대통령 및 제3대 부통령 선거에서 한국기독교연합회는 기독교선거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권연호, 김종대, 안창기 등 각 교파 대표들로 구성된 위원들을 선임해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지지했다. 이들은 전국 3,500여 교회에 위원회를 조직, 선거운동을 지원키로 한 후 “기독교인의 대통령” 이승만에 표를 던질 것을 호소²¹⁾했다. 이러한 한국교회와 친기독교 정부 간의 밀월과 정교유착은 한국전쟁을 거치며 군중제도의 도입, 경목·형목 제도의 도입, 일요일 공휴일화, 크리스마스 공휴일화 등 기독교의 교세확산과 지배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특혜를 향유²²⁾했다. 이러한 정교유착의 민낯은 1960년 4.19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으나, 이후로도 군부 독재 정권을 정당화하는 조찬기도회 등을 개최하며 국가 권력으로부터 여러 혜택을 받기도 했다.

5) 교회분열

한국전쟁이 한국교회의 본격적인 내부적 갈등과 분열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하지만 고신파 분열(1951), 기장·예장 분열(1953), 예장합동·통합 분열(1959)의 역사적인 사건들이 한국전쟁 진행과정 중이나 직후에 전개된 것을 보면 한국

19) 노치준, “한국전쟁이 한국교회의 성격 결정에 미친 영향”, 「기독교사상」, 1995년 6월호, 11.

20) 강인철, 『경합하는 시민종교들 : 대한민국의 종교학』, 성균관대출판부, 2019, 99.

21) “기독교인의 정치생활”, 「기독교공보」, 1952년 8월 4일자.

22) 강인철, 「한국 개신교회의 정치사회적 성격에 관한 연구 : 1945-1960」,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1994, 183-187.

전쟁이 한국교회의 분열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보다 깊이 들여다보면 한국전쟁은 청산되지 않은 일제의 역사적 부채와 모순의 결과였다. 1950년대 전개된 한국교회의 분열 사건들 또한 일제강점기 한국교회의 훼손과 권력화가 낳은 예고된 비극이 아니었을까.

교회의 외형적 성장과 더불어 전개된 교회분열의 역사는 “교회의 윤리적 패배”²³⁾가 아닐 수 없다. 아울러 분단된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한국교회의 이념적 분열과 갈등 또한 매우 쓰리고 비극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화해와 다양성 속에서의 일치와 대화를 향한 노력은 포기되어선 안 될 것이다.

3.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은 한국교회의 역사적 과제

한국전쟁 70년을 맞았다. 한국전쟁과 관련한 한국교회사 분야에서의 연구도 그동안 많은 성과와 축적을 이루었다. 주로 한국전쟁을 통해 전개된 구호(혹은 선교)사업이나 기구사, 종교현상이나 이념적 측면에 대한 연구가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한국전쟁 당시 전개된 기독교인의 혹은 기독교인에 대한 민간인 학살에 대한 연구²⁴⁾나 한국전쟁 당시 활동한 메노나이트의 평화운동²⁵⁾ 등 기존에 다루지 않았던 한국전쟁과 관련된 새로운 영역의 주제들이 발굴, 연구되고 있다. 아울러 강성갑²⁶⁾, 서기훈²⁷⁾ 등과 같은 좌·우 어디에도 경도되지 않고 기독교신앙에 따른 제3의 길을 모색했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대안적 연구도 모색되고 있다.

분단과 갈등은 항구적일 수 없다. 진정한 화해와 공존은 냉정하고 진지하게 역사의 진실을 대면하고 서로의 과오나 한계를 인정하고 손잡을 때 가능하다. 갈등과 반목의 시대를 지나 공존과 화해, 평화의 시대를 선언한 오늘 우리는 한국전쟁의 비극적 역사 속에서 한국교회가 보여준 부끄러운 민낯을 응대할 용기도 지녀야 할 것이며, 평화와 공존의 길을 모색했던 대안적 겨자씨의 역사들을 발굴하고 추적하고 세상에 드러내야 할 책임과 소명이 있다.

23) R. Niebuhr, 노치준 역, 「교회분열의 사회적 배경」, 종로서적, 1983.

24) 최태육, “6. 25전쟁 개전 초기(1950.6-9) 민간인 집단희생과 한국 기독교의 관계”,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44호, 2016. ; 최태육, “6.25전쟁 시기 기독교인 희생사건 기록문제”,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37호, 2012. 외

25) 정성한, “한국전쟁과 메노나이트 평화운동 : 아나뱃티스트 한국교회사 서술을 위한 서론적 고찰”, 「한국교회사학회지」, 제39호, 2014.

26) 홍성표, “해방공간 강성갑의 기독교 사회운동 연구”,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45호, 2016.

27) 조선훈, “십자가의 사람 서기훈 목사”, 『동부연회 순교자열전』,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14.

분단 이데올로기와 한국 교회의 신학(신앙)

최형묵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장)

1-1. 한국사회에서 분단 이데올로기는 남북 분단체제하에서 그것을 정당화하는 이념을 뜻한다. 남쪽에서 그것은 강력한 반공주의로 표현된다.

1-2. 그것은 남북간 체제 대결의 이념에 그치지 않고, 사회 내의 여러 ‘분단’ 이데올로기를 조장하고 양산한다. 이른바 ‘남남갈등’을 조장할 뿐 아니라, 여러 차별의 논리를 정당화하는 밑바탕이 되고 있다. 예컨대 ‘빨갱이’ 또는 ‘종북주의자’라는 규정은 모든 합리적·윤리적 판단을 정지시키는 효과를 발휘하고, 그렇게 특정한 대상을 비인간화하는 논리는 다른 사회적 소수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우리 사회에 ‘이면헌법’이 존재한다는 것(백낙청)은 이런 사정을 두고 하는 말이다.

1-3. 유감스럽게도 한국 기독교가 그 반공주의를 공고히 하고 확산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바로 그 점에서 한국 기독교는 남북의 평화와 사회적 평화를 이루는데 기여하기보다는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오늘 우리가 분단 이데올로기를 문제 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맥락에서이다.

2-1. 한국 기독교가 반공주의에 집착하고 극단적 대립의 논리를 펼치는 것은 과연 필연적인 것일까? 종교적 신앙은 보편적 인류애를 지향함으로써 평화를 이루는데 기여하는 한편 자기완결적인 세계관에 간혀 배타성을 강화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데 기여하는 모순된 양 측면을 지니고 있다(Gordon W. Allport, 『편견』). 우리는 한국 기독교 역사 안에서 그 양 측면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다.

2-2. 그 모순된 양 측면이 존재한다는 것은 특정한 역사적 조건에 따라 종교적 신앙이 화해와 평화에 기여하는가 하면 정반대로 갈등과 대립에 기여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한국 기독교가 반공주의에 집착함으로써 극단적 대립을 야기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 자체의 필연적인 귀결이라기보다는 한국 현대사에서의 특수한 역사적 조건에 따른 것이라는 것을 말해 준다.

2-3. 흔히 한국 기독교의 반공주의는 ‘공격적 반공주의’ 또는 ‘행동주의적 반공주의’로 일컬어질 뿐 아니라, 신앙적 교조의 수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에서 심지어 ‘성스러운 반공주의’로까지 일컬어진다(강인철, 『한국의 개신교와 반공주의』).

2-4. 그 반공주의는 하나의 이데올로기로서 그 자체로 머물지 않고 우리 사회에 매우 폭넓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다른 기제들과 긴밀히 결합되어 있다. 예컨대 친미주의, 교회-국가 유착, 교회-자본 유착 등과 관련되어 있다(강인철). 말하자면 반공주의의 외연은 매우 넓고, 따라서 한국사회에서 매우 강력한 지배의 논리로 작동되고 있다.

3-1. 한국 기독교의 반공주의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한국 현대사에서의 특수한 조건과 결합되어 형성되고 확산되어 왔다.

3-2. 한국 기독교의 반공주의가 주로 월남 기독교인을 중심으로 강화되어 왔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윤정란, 『한국전쟁과 기독교』). 한국전쟁을 계기로 더욱 강화된 반공주의는 전쟁 후 이른바 한국적 근대화의 과정에서 명실상부하게 지배 이데올로기로 자리하게 되었다. 그것이 지배 이데올로기로 자리하게 되었다는 것은 단지 교회만의 어떤 사상적 편향에 그치지 않고 한국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물론 한국 교회가 이데올로기적으로 이를 뒷받침하였을 뿐 아니라 인적으로 지배체제와 강고하게 결합되었다는 것은 두말할 것 없다.

3-3. 전쟁기의 ‘전투적 반공주의’는 전후 그 성격이 일정하게 변화되는데, ‘승공’론의 등장이 그 변화를 말해준다(윤정란 등). 승공론은 자유 민주주의 수호와 경제적인 성장을 통해 북한의 체제보다 남한의 체제가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을 요체로 한다. 이로써 반공주의는 단지 억압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지배 이데올로기로서 몫을 하게 된 셈이다. 전투적 반공주의를 강화한 것이 월남 기독교인들의 경험에 근거하고 있다면, 변화된 반공주의로서 승공론 역시 월남 기독교인들에 의해 제창되었다. 이들에 의해 주도된 한국교회가 민주주의를 요구한 4.19를 지지한 것과 동시에 그에 역행하지만 경제성장을 내세운 5.16을 지지한 것도 그 승공론에 기초한다. 이 일련의 역사적 과정에 한국기독교연합회(NCCK)가 중심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3-4. 그러나 단지 대결과 억압의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둔 반공주의로서 승공론의 대두는, 반공주의 자체의 전화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반공주의의 균열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4.19를 거친 후 한일회담 반대운동, 그리고 결정적으로 유신체제의 등장과 함께 한국 교회 한편에서 민주화와 인권운동, 그리고 민중선교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면서 그 균열은 점차 가시화되었다.

3-5. 결국 1988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가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회 선언>에서 ‘분단과 증오에 대한 죄책고백’을 하게 되었을 때 그 균열은 결정적인 것이 되었다. 이후 1989년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가 결성된 것은 88선언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 일각에서 반공주의와 결별을 천명하게 된 것은 88선언이 그 계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3-6. 그런데 그 공식적 천명 이전에 이미 반공주의와 결별하게 된 근본적인 동인을 부여한 계기는 무엇이였을까? 이에 대해서는 더 깊은 탐구가 필요하지만, 그것은 역시 1980년 광주민중항쟁이었다 할 것이다. 이후 폭발적으로 분출한 민중운동의 과정에서 미국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대안적 사회에 대한 모색이 깊어졌기 때문이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광주민중항쟁을 계기로 선언적 주체로서 실질적 주체로 등장한 민중을 재발견한 데서, 반공주의의 질곡을 넘어선 전망이 교회 안에서도 확실하게 공유되었다 할 수 있다. 이는 민중신학이 ‘세대’를 달리하며 변화 발전해온 궤적을 통해서도 일정정도 설명될 수 있다.

4-1. 한국교회 일부가 반공주의의 질곡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비로소 특정한 이데올로기적 강박관념으로부터 벗어나 그 자신의 신앙적·신학적 지평을 펼쳐나가게 되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앙고백을 기초로 하며, 그 구체화로서 이 땅 위에 이루어야 할 대안적 세계의 모색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

4-2. 때마침 1988년 이후 1990년 JPIC 세계대회가 한국 서울에서 열렸다. 그것은 세계교회 에큐메니칼 신학의 향방을 제시하는 하나의 계기였지만, 한국교회의 신앙과 신학에도 그 이정표를 제시하는 계기가 아니었을까? 그로부터 한참 지난 후 2013년에는 세계교회협의회 제10차 총회가 한국 부산에서 열렸다. 그 총회의 주제가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였다. 처음으로 ‘정의’가 세계교회의 주제로 표방되었다. 한국교회는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세계교회와 호흡하며 신학적 성찰을 발전시켜왔다. 그간의 시도와 노력 그 자체를 폄하해야 할 이유는 없다.

4-2. 그러나 교회 자체로 보나 신학적 성찰의 측면에서 보나 그 활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 까닭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여러 측면에서 이에 대한 해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화의 효과일까? 종교적 운동의 상대적 역할 축소? 여전히 사회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지 않은가? 4.27 이후 희망의 빛이 보이기는 했지만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분단체제의 강고함, 신자유주의 파고로 심화되고 있는 격차와 불평등, 세계 공통의 위기로서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의 심화, 사회 한편에 만연해 있는 혐오와 차별 등등... 교회와 신학이 안고 씨름해야 할 과제들이 없어서 활력을 잃은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4-3. 한 측면에서의 해명에 지나지 않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적어도 반공주의의 위력이 약화되고 있는(여전히 성급히 말하기 어려운 면이 있기는 하지만) 국면에서 한기총을 비롯한 보수 기독교 세력의 요란한 목소리에 묻혀버린 효과를 지나칠 수 없다. 여전히 분단 이데올로기에 집착하고 있는 교회의 행태가 오히려 더 조명되고 분단 이데올로기를 벗어난 교회의 존재감이 잘 드러나지 않는 상황이다. 전 사회적으로 반공 이데올로기의 강박에 매여 있을 때는 기독교가 방패막이 역할을 맡는 가운데 그 폐해를 넘어서고자 하는 연대의 활력이 살아 있었으나, 이제 전 사회적으로 분단 이데올로기의 폐해를 넘어서고자 하는 분위기가 강화된 상황에서 이와 입장을 같이하는 교회는 작은 일부로 비취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4-4. 그 사회적 역할이 상대적으로 축소되었지만, 분단 이데올로기를 넘어선 교회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 앞서 확인했듯이, 오늘 분단 이데올로기가 문제시되는 것은 그것이 끊임이 또 다른 ‘분단’ 이데올로기를 양산하는 기반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최후 보루로서, 한국사회 보수주의를 뒷받침하고 있는 교회에 성찰의 계기를 부여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다. 한기총이 그 목소리는 요란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지지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현상은 극단적인 분단 이데올로기가 더 이상 광범위한 설득력을 지니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 대안으로 등장한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이 어떤 가능성을 보여줄지 아직 알 수 없지만 새로운 교회연합의 등장은 적어도

극단적인 분단 이데올로기에 매인 교회가 사회적 공감을 얻지 못한다는 것만큼은 반증해주고 있다. 그 교회의 미래는 과연 얼마만큼 예민하게 시대정신을 읽어내고 변모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우리의 과제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갱신할 뿐 아니라 보다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형성하기 위한 과제를 찾아나서는 것이다. 이로써 하나님 나라가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믿음에 걸맞게 우리 사회를 선도해가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5-1. 신학이 보다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계를 이루기 위한 교회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려면, 신학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선언으로 충분하지 않다. 우리 사회와 교회가 공통적으로 부딪히고 있는 문제 상황에 집중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실천적 신학하기의 태도가 중요하다. 민중신학이 그저 선언으로 탄생한 것이 아니라, 한국 민중현실을 주목하고 민중사건의 의미를 성찰한 데서 형성되었다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고, 그 신학하기의 태도는 여전히 유효하다.

5-2.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오늘 우리가 분단 이데올로기를 문제시하는 것은, 그것이 남북간 평화체제의 형성에 걸림돌이 될 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여러 차별의 논리를 양산하고 정당화하는 밑바탕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타자를 정죄함으로써 스스로의 정당성을 내세우는 고질적인 병폐가 한국교회 안에 깊이 자리하고 있다. 반공주의 전선은 반동성애, 반이슬람, 반이주민 전선으로 연장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여러 차례 시도되어 온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5-3. 우리의 신학은 그 상황을 타개하고, 보다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이루는 데 기여하는 전망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일찍이 “민주와 통일은 하나”라고 했던 문익환 목사의 통찰은 우리의 실천적 신학의 상상력을 고무한다. 예컨대 사회정의, 생태정의, 성정의 등은 각각의 고유한 과제로서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동시에 상호 연관되는 접촉점을 지니는 과제들이기도 하다. 우리가 추구하는 평화는 단지 소극적 의미에서 전쟁 없는 상태 또는 남북 체제의 공존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의미에서 일상의 삶의 평화를 기반으로 하고 또한 목적으로 한다. 그렇다면 지금 직면하고 있는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통합적 전망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분단체제, 젠더관점에서 본 한국교회

이문숙(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

3년간의 한국전쟁이 정전협정으로 일단락되면서 한반도에 남북 분단체제는 고착화의 길로 접어들었다. 정전협정 조인 후 3개월 내에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보장하기 위하여 ‘한국에서 모든 외국군대를 철수하고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의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했지만, 이후 협의 같은 것은 없었고 평화의 길은 멀고 험해졌다.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군사적 대치 상황에서 남북 국민의 삶은 전쟁에 준하거나 전쟁을 준비하는 형태로 지속되었다. 군사력 강화와 군사주의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규범이 되었다. 분단상황에서 스스로를 세우고 세력을 키운 독재정권 아래서 사회의 조직들은 정권의 권위주의적 위계구조를 모형으로 삼아 군사주의문화를 재생산하였다.

적을 쳐서 이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군사주의는, 강자의 지배와 독점과 탈취를 정당화하는 힘 논리와 공권력의 폭력을 당연시했다. 분단상황을 발판삼은 독재정권의 위세는 국민들을 군사주의 질서에 순응하도록 순치하고, 총화단결과 일사불란함을 요체로 하는 전체주의 사회를 구축해갔다. 이 같은 군사주의의 작동은 남성지배적 가부장제와 얽혀 여성들에게는 이중의 굴레가 되었다. 국가안보를 떠맡은 군대의 일을 미화하고 군복무를 올바른 남성이 되는 길로 인식하는 사회에서, 여성은 남자 혹은 군대의 보호 아래 머물면서 남자가 강한 남성성을 발휘하도록 뒷바라지를 하며 후방을 지키는 역할을 맡았다. 자연히 여성은 공적부문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한 가정에 예속돼 사소한 일로 치부되는 일들을 하는 사적 존재로 소외되었다.

민족/국가, 군사주의 그리고 여성

가부장제의 젠더 모순은 전쟁시 혹은 준 전쟁 상황에 득세하는 과도한 군사화와 군사주의 환경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본다.

여성이 전쟁에 동원되고 여성의 몸이 그대로 전장이 되는 일은 많은 전쟁역사를 통해 알려져 왔다. 일제 식민지 전쟁에서처럼 한국전쟁 중에도 여성에게 성폭력이 여러가지 형태로 일어났지만, ‘한국군 위안부’가 제도적으로 운영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다. 1950년대 두 가지 형태의 여성군인이 있었는데, 간호자격증을 가지고 군사훈련을 받은 정규군(31명)과 ‘특수위안대’인 비정규군이 그들이다. 육군본부의 한 기록은 특수위안부에 대해 이렇게 적고 있다. “장기간 대가 없는 전투로 인하여 후방 레왕이 없으니만치 이성애에 대한 동경에서 야기되는 생리작용으로 인한 성격의 변화 등으로 우울증 및 기타 지장을 초래함을 예방하기 위하여” 본 특수 위안대를 설치하게

되었다.(육군본부 1956:146).

남북의 군사적 대결 상태에서 주한 미군은 한국의 안보를 보장해주는 상징적 존재로 여겨졌고, 지금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다. 주한미군 주둔 지역은 기지촌이 되었고, 당시 군사정부는 기지촌에 거주하는 미군들에 대한 성매매를 금지하는 고사하고 거의 장려하는 수준이었다. 직업을 구하려 애쓰다 잘못된 정보에 유인돼 자기도 모르게 기지촌 성매매에 유입돼 강압적 상황에서 헤어날 수 없는 여성들을 미군에게 애국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외교관으로 칭송했다. 기지촌 여성들이 미군의 성폭력에 고통당하고 죽어가도 범죄자를 처벌하지 않고 쉬쉬하고 넘어갔으니, 국가안보라는 것이 누구를 위한 이데올로기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1990년대 한창 주한미군 범죄근절을 위한 운동을 전개하던 때의 일을 언급해야 할 것 같다. 한 성매매 여성이 미군의 성폭력에 비참하게 희생된 사건은 주한미군 성범죄에 대해 본격적인 문제제기와 대책활동으로 이어졌다.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이때 주한미군의 성범죄를 가부장적 군사주의 문화속에서 일어난 성폭력과 여성인권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여성활동가들에게 함께 주한미군 범죄근절을 위해 일하던 남성운동가들의 보인 태도다. 그들은, 자꾸 여성인권문제를 들고나오면 소파(주한미군 주둔에 관한 협정) 개정운동의 초점을 흐린다고 하며, 그 얘기는 좀 그만하라고 했다. 소파개정 하면 주한미군에 의한 성폭력문제도 통으로 해결될 것이니 큰 담론에 집중하자는 것이었다. 주한 미군과 관련된 활동을 여성과 남성이 함께 했지만 남성들 보기에 ‘군사주의와 여성억압’은 민족/국가 의제가 해결된 다음에 생각할 부차적인 문제였던 것이다.

박정희 정권은 1965년 일본과 맺은 한일협정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전혀 거론하지 않았고 전시 성폭력 희생자인 일본군 ‘위안부’의 비참한 경험은 역사의 뒤편에 묻혀졌다. 1990년대 초 한국교회여성연합회가 주축이 되어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자신이 ‘위안부’였다는 김학순 위안부피해생존자의 증언이 이어지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이 불이 붙었고, 종교 시민단체 여성들이 대오를 지어 여성운동의 큰물결을 만들어 왔다. 남성지배적 가부장제의 정조 이데올로기에 길들여진 사회에서 남성은 물론 무릇 여성들 사이에서도, 민족의 수치이고 여성의 수치인 ‘위안부’문제를 가지고 떠든다는 비판이 만연했다. 그런데 민주화운동에서 여성들이 성차별문제를 제기하는 여성운동을 달가워하지 않던 남성들이 여성들의 ‘위안부’운동에 상대적으로 시비를 걸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었다. 이는 남성들이 ‘위안부’문제를 젠더문제로 보기보다 반일-민족주의 선상의 의제로 바라보았기 때문일 수 있다. 이른바 피해자민족주의 관점이 작동해 국가/민족 가부장을 안심시켰던 게 아닐까...

분단상황의 교회와 여성

한국교회는, 이분법적 선악관 혹은 근본주의 성서해석의 토대 위에, 그리고 6,25 전

쟁의 피해의식의 토양 위에 반공이데올로기와 분단적 사고 그리고 군사주의 문화를 거침없이 이식했다. 이 점에서 이 사회 여느 집단들의 추종을 불허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목회자와 신도간의 지배-복종이라는 위계는 독재정권 환경에서 하등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았고, 여신도들은 가부장적 문화 속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역할만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잠잠히 견뎠다.

분단체제에서 국가가 경제력과 군사력 우위 경쟁에 몰입할 때 교회는 이런 흐름을 그대로 내면화 이분법적 힘의 논리로 교회성장에 대한 욕망을 가열시켰다. 목사의 설교와 찬송가 속의 가부장적 힘을 상징하는 언어와 군사용어들은 무비판적으로 혹은 의도적으로 사용하면서 전투적 신앙을 북돋웠다. 분단상황에 대한 반공적 교회담론은 목회자가 주도했고, 가부장적 위계구조 속에서 복종과 순종을 신실함의 척도로 삼게 된 교회여성들은 북한을 악마시하는 목사의 가르침과 선동에 압도되었다. 여성은 물론 남성 교인들도 이를 금과옥조로 받아들이는 것 외에 다른 도리가 없었고, 북에 대한 적대감과 증오로 북한 북음화와 흡수통일에 대한 전사적 신념을 키웠다. 다른 의견의 제시나 목회자에 대한 불순종은 불신앙의 증거가 되는 상황에서 여성들은 교회의 가부장적 군사문화에 순응해갔다. 교인들은 남녀없이 그렇게 분단체제가 작동시켜온 삶을 정상으로 생각하고 살아왔다.

앞의 몇가지 사례에서 보듯 ‘민족/국가’는 근대 이후 일제식민지와 분단과 전쟁을 거치면서 다른 의제들을 주변화하고 우리 사회에서 그야말로 초월적 지위를 굳건히 해왔다. 교회와 많은 교회남성 목사도 민족/국가의 독재자가 그랬듯 그 가부장적 위계의 절정에서 같은 초월적 위상을 과시했다.

교회의 과반수를 넘는 여성들은 기도로 봉사와 헌금으로 교회성장을 일군 주역인데도 교회는 공적영역의 활동(설교, 교육)과 의사결정구조에서 여성교인들을 배제하였다. 여성역할로 고정된 돌보고 봉사하는 일은 모성적 희생으로 칭송하면서, 사소하고 덜 중요한 일로 간주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독재정권에 저항하며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깨어있는 교회여성들은 교회내 불평등한 성규범과 여성차별에 눈을 돌려, 교회민주화에 관심을 쏟았고, 나아가 교회와 사회의 남녀평등과 민주화의 주요 걸림돌이 가부장적 군사주의를 조장하고 강화하는 분단상황이라는 결론에 닿았다. 1980년대 민주화운동의 영향으로 각계 각층에서 목소리가 터져나오면서 분단상황에 대한 문제의식도 공공연히 불거졌고 이는 분단체제를 흔들기 시작했다.

여성주의는 교회와 하나될 수 있을까

교회여성에큐메니칼 운동은 분단상황을 여성의 삶과 연결시켜 고민하며 평화통일을 위

한 다양한 노력을 펴왔다. 주지하건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1988년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교회선언’을 발표했다. 이 선언은 지금까지 통일에 관한 빛나는 장전으로 알려져 왔지만, 여신학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여성들은 이것이 분단체제 하의 가부장제 폐해와 젠더문제를 담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한반도 분단의 궁극적 원인을 가부장적 지배문화의 결과”이며 “분단상황의 극복과 민족통일의 성취는 생명을 억압하고 폭력과 죽음의 지배를 가져오는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의 청산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의 ‘민족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여신학자 선언’(1988.3.29)을 발표했다. 분단상황과 교회내 성차별 문제를 한 맥락에서 분석하고 한반도 평화통일과 교회민주화를 위해 일해온 여성들과 분단사고와 남성지배적 가부장적 구조에 메인 많은 한국 교회는 하나일까. 그렇지 않은 것이 분명한데, ‘일치’를 꿈꾸기엔 서로 거의 반대방향으로 너무 멀리 나간 것 같다.

한 교회기구가 “동성애와 공산주의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라는 제목의 강연회를 열고 공산주의 있는 곳에 동성애가 있다는 식의 주장을 편 일에 대해 읽은 적이 있다. 여기서 모 대학교수는 “젠더이데올로기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전면 도전하는 반신론적 이데올로기로, 이 이데올로기는 마르크시즘과 같이 태생적으로 수천년간 이어진 전통적 유산을 부정하고, 각종 비정상적 성 생활을 용인하고자 한다”고 강변했다. 얼마나 많은 교회와 교인이 이런 주장에 동조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주장이 최근 진행되는 차별금지법을 개정 노력에 대한 반발로 이어질 것은 불을 보듯 환하다.

동성애에 대한 혐오는 여성에 대한 차별/혐오와 무관치 않다. 성에 대한 무관심과 몰이해로 일관하고 성에 대한 언급조차 타부시하는 교회가 성소수자를 공격할 때 쓰는 매우 듣기 불편한 구체적인 성관계에 대한 표현은 경악스럽기까지 하다. 이들이 성소수자들이 공산주의와 관계라도 있는 양 나란히 언급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다. 추측컨대 성소수자가 공산주의처럼 위험한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고 둘에 대한 혐오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그러는 것 같은데, 사실 이들의 행태는 ‘약자에 대한 안전한 혐오’로 보인다. 이들이 배척한다고 해서 공산당이나 성소수자가 반격할 리(수) 없고, 따라서 자기들이 상처입을 염려가 없으니 공격하는 것이다. 특히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은, 여성이 차별속에 사는 약자지만 사회 구성원의 반인 이들을 공격하는 것은 아무래도 위험하니까, 성혐오의 대상을 공격할 가능성이나 힘이 없는 성소수자로 잡는 것이다. 분단상황에서 새긴 분리적 사고 그리고 힘논리가 이제는 이 사회에서 맥을 못추는 공산주의와 생물학적 여성보다 더 만만한 성소수자에게로 향하는 혐오로 드러나는 게 아닐까.

그런데 분단체제가 허락한 위계적 분단사고와 약자에 대한 비겁한 폭력성을 유독 교회가 나서서 재현하는 것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민족 화해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교회의 소명 (확인과 제안)

김희헌 (기장 평화공동체운동본부 집행위원장)

1. 한국전쟁 70주년의 의미, 분단체제를 넘어서

한국 사회는 지난 칠십여 년 동안 전쟁의 상처와 분단의 질곡으로 인해 고통당해왔다. 분단이 제도화된 ‘분단체제’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정치경제 제도와 사회문화 질서는 물론이요, 사람들의 기억과 감정까지 지배하는 구조적 모순과 병리 현상의 온상이었다. 이 견고한 체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는 무수한 갈등과 혼란을 겪었다.

분단과 전쟁으로 인한 대결과 증오의 체제에서 자유로운 존재는 없다. 한국교회 역시 분단체제라고 하는 근원적 한계상황을 경험했다. 외적으로는 사랑과 평화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부족했고, 내적으로는 교회 스스로 증오와 대립에 물들어갔다. 분단신학에 지배되어 그리스도의 평화와 사랑의 복음을 살려내지 못한 것이다. 분단과 전쟁을 겪고 삼십여 년이 흐르고 나서야 비로소 기독교 화해통일 운동이 시작되었으나, 여전히 대다수의 한국교회는 반공주의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는 분단체제가 만들어진 과정에서 발생한 사회적 비극과 이 체제를 극복하지 못한 신앙적 실패가 겹쳐있다.

한국전쟁 70주년의 의미는 분단체제를 극복하는 작업에서 찾아야 한다. <판문점선언>을 통해서 시작된 한반도의 탈냉전 기류는 새로운 미래에 대한 기대를 부풀게 했다. 하지만 작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 이후 남북관계는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이 모든 것이 분단체제의 질곡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를 말해준다. 하지만, 세계사적인 지각변동이라는 외부적 여건과 촛불 혁명과 정권교체 이후 변화된 국내의 여건에서 한국교회는 새로운 시대를 향한 진취적인 노력을 재개해야 한다.

2. NCKK 화해통일 운동의 의미와 평가 : <도잔소 프로세스>와 「88선언」

분단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기독교 통일운동에는 수많은 모험과 헌신이 있었다. 그 가운데 몇 가지만 간추려서 그 특징과 의미를 언급하고자 한다. 먼저 반공주의에 젖어 평화의 싹도 낼 수 없는 폭압적 시대에 해외에 거주하던 기독교인들이 통일운동의 물고를 낸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1979년 서독에 거주하던 기독교인들(김순환, 이영빈, 이화선)을 중심으로 ‘조국통일 해외 기독교자회’(기통회)를 조직하였다. 이들은 1981년에 북한을 방문하여 ‘조선기독교도연맹’의 고기준 목사와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여연구 등과 협의를 거쳐, 11월 오스트리아의 비엔나에서 ‘제1차 조국 통일을 위한 해외동포 기독교대

회'를 가졌다. (시사저널, 1994. 4. 7) 전금철, 허정숙, 고기준 등 북한에서만 삼십여 명이 참석한 이 대회에 대하여, 『로동신문』은 “민족의 화해와 단결, 조국통일을 위한 첫 역사적인 회합”이라고 보도했다. 대회는 몇 차례 더 지속되었다. (2차 대회는 1982년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렸고, 북에서는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의장이 참석) 기통회는 문익환 목사보다도 먼저 북을 방문하여 금단의 벽을 허물었고, 통일운동에서 선구적인 역할을 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참고)

한국교회가 반공주의의 벽을 넘어 반미적 상상력을 갖게 된 때는 광주민주화운동을 거치면서부터일 것이다. 1981년 6월 서울에서 열린 제4차 ‘한-독교교회협의회’는 ‘분단국에서 교회의 과제는 통일’임을 고백하고, 이 일을 수행할 기구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에 두기로 한다. 이 제안에 따라 다음 해에 ‘통일문제연구위원회’가 만들어졌으나 그 활동에는 제약이 많았다. 하지만 4년 후 1985년 NCCK 제34차 총회에서는 <한국교회 평화통일 선언>을 채택하였고, 여기서 분단 고착화 과정을 묵인하고 동조했던 한국교회의 죄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민중 주체의 평화통일’을 선언한다. 이것은 3년 후 한국교회 통일 운동의 이정표라고 할 수 있는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관한 한국교회 선언, (88선언)>을 낳는 토대가 되었다.

교회가 통일 운동에 눈 떠갈 때 한국 사회는 전두환 정권의 폭압 통치 아래 있었다. 한국교회는 국내적 어려움을 세계교회와의 협력을 통해 풀어갔다. 기폭제가 된 계기는 세계교회협의회(WCC)가 주선하여, 1984년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일본 고텐바시의 YMCA 수련관인 동산장(東山莊, 도잔소)에서 한반도 통일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모인 ‘동북아시아 평화와 정의에 관한 협의회’였다. 비록 초청받은 북측 대표들이 참석하지 못했지만, 세계교회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선언이 있었다.

이렇게 시작된 ‘도잔소 프로세스’는 1차 모임을 1986년 9월 스위스 글리온에서 갖고, 남북의 교회 대표들과 함께 성만찬을 나누게 된다. 2차 모임(1988년 11월, 글리온)에서는 매년 남북공동기도문을 작성하여 8.15 해방기념 직전 주일에 함께 기도하기로 하였고, 3차 모임(1990년 12월, 글리온)에서는 「88선언」에서 희년으로 선포한 1995년을 앞두고 ‘희년 5개년 공동작업’ 계획을 마련하고, 남북교회의 만남을 한반도에서 개최하기로 협의하였다. 이렇게 이어진 ‘도잔소 프로세스’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국제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탄탄한 통일 운동의 흐름을 만들어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나핵집, “한국교회 평화통일 운동의 역사와 전망” 참고)

<88선언>의 중요성을 잠시 언급할 필요가 있다. 1988년 2월 29일 NCCK 제37차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이 선언은 ‘민간 부분에서 제출된 최초의 본격적인 통일선언’으로서 의미를 갖고 있다. 이 선언에 담긴 한반도 통일에 관한 예언자적이며 균형 잡힌 목소리는 기독교인들을 일깨우는데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에서 통일 논의를 추동시키는 역할을 했다. 그해 발표된 정부의 통일외교정책의 기본방향을 담은 ‘7·7특별선언’을 앞당기는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 정부정책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기본합의서」(1991년 12월)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1992년 1월)은 <88선언>의 기본내용을 거의 담고 있다.

한국교회가 냉전과 공안통치 시기에 통일 운동의 선구적 활동을 한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다. 특히 국제적인 협력과 연대 속에서 남과 북이 직접 만나는 자리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통일 의지를 고취하는 상징적인 활동을 한 것은 가슴 뛰는 기억이다. 하지만 전체 한국교회의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한반도 통일 선교의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런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가운데 하나가 <88선언>에서 선포했던 ‘통일 희년’에 관한 실질적인 교회적-사회적 전환점을 만들어내지 못한 것이다. NCKK는 ‘남북인간띠잇기’라는 상징적인 행사를 기획하여 정부의 협력과 시민사회의 연대 속에 진행하였으나, 지속적인 통일 선교의 동력을 끌어내지는 못했다.

왜 한국교회 통일 운동은 80년대에 보여주었던 예언자적 활동을 확장하지 못하고 있을까? 교회 내부적으로는 신자유주의라는 불안한 시대에 성장주도적 선교활동에 매몰되어 한반도 통일선교의 관심을 이끌지 못했고, 외부적으로는 정부 차원에서 남북관계가 개선되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해오던 방식의 통일운동이 지닌 중요성과 상징적 의미가 상대적으로 퇴색했다고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측면은 앞으로 한국교회의 화해통일 운동을 구상하는 데 염두에 두어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

이제 사회적 여건의 변화에 맞춰 기독교 통일 운동의 위상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권위주의 시대의 공안통치가 끝나고 민주 정부가 수립되면서 기존에 해오던 선도적/상징적 통일 운동은 변화 요청을 받고 있다. 김대중 정부의 <6·15선언> 이후 남북관계가 진전됨에 따라, 남북교류와 방북은 어렵지 않은 일이 되었다. 그리고 민주 정부가 주도하는 통일정책에는 민간 부분의 목소리가 수용되고, 또 구체적 사안에서는 정부 시책이 앞선 측면도 있기에, 남북관계라는 특수성 속에서 국가 주도적 양상은 가속화되었다. 또한, 열린 공간에서 진행되는 교류 활동의 수량적 측면에서 자본과의 경쟁은 불가능한 일이 되었다.

그렇다면, 기독교 통일 운동은 국가주도적 활동이 담보할 수 없는 풀뿌리 평화운동으로, 자본과 기업의 활동이 유발하는 공동체적 삶의 파괴에 맞설 상상력 있는 대안 체제 운동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단절된 남북교류와 미국주도의 대북제재로 인한 현재의 경색 국면을 돌파할 결단력 있는 조처 역시 필요하다. 그것 역시 대안적 풀뿌리 평화운동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근본적인 힘을 얻을 것이다.

3. 교회의 소명 : 용서와 화해, 평화운동의 지역화(localization)

새롭게 열린 탈냉전의 흐름에서 정부와 자본이 주도하는 남북교류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한계는 분명하다. 필요한 것은 민(民)이 주체가 되는 운동이다. 이 원리는 더 나아가 개신교 통일 운동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 화해통일 운동 역시, 상층 지도부 운동보다는 평신도들과 작은 교회까지 주체가 될 수 있는 운동방식이 모

색돼야 한다. 물론 시민사회 운동과도 분리되지 않고, 이웃종교와 연대까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려면, 풍부한 경험을 가진 기독교 통일 운동의 인적-역사적 자산을 소중하게 보듬어야 한다.

소명을 다해 헌신할 기독교 운동을 위해 유의할 사실이 있다. 한국전쟁 이후 70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분단체제는 여전히 공고하고, 권위주의 정권에서 나타났던 화해정책(박정희의 7·4남북공동성명 발표, 노태우의 북방정책)만이 아니라 소위 민주 정부에서 실시한 진취적 시도들조차 결국에는 국가주의적 활동으로 귀속되고, 시민들은 결국 대립적 진영논리에 희생당하는 일이 반복되어온 사태가 그것이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까닭은 근본적으로 국가 자체가 지배체제요, 폭력적 대립구조를 기반으로 하여 존립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래로부터 동력화된 평화운동이 절실하다. 다시 말해서, 용서와 화해, 평화운동을 전개할 때 국가의 독점적 역할을 해체하고, 민이 자기 주도적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을 가리켜 ‘운동의 지역화’(localization)라고 부르자. 분단과 전쟁에서 빚어온 증오를 씻어내는 속죄와 화해를 국가에 전가하지 말고, 아래로부터 민-주도의 평화운동을 전개하자는 말이다. 그것이 민도 살고, 역사도 사는 길이다. 남-북 관계만이 아니라, 한-일 관계와 한-베 관계에서도 이 원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현실에서 에큐메니컬 교단 대부분이 질곡을 벗어나지 못하고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관성적 무기력을 씻어내고 평화운동을 모험적으로 다시 벌일 방안을 찾아보자. 전체적으로 보면, 해외 선교에 쏟았던 관심을 한반도 선교를 위해 일정 부분 전환하고, 여기에 도시-농촌 교회 간의 협력적 시너지가 발휘될 수 있는 구도로 진행하면 좋겠다. 북-미 관계나 남북관계의 상황에 따라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중장기적 전망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밟아갈 필요가 있다. 그동안 기울인 평화통일 운동의 경험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경험을 통해서 형성한 남북의 신뢰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필자가 속한 교단인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의 예를 들어 살펴보자. 기장은 다음과 같은 대북지원과 협력사업의 경험이 있다. 1996년 북한동포 돕기 사랑의 헌금을 시작으로, 1997~8년 평화의 성금보내기 운동, 1999년 북한동포 돕기 사업, 2002년 사랑의 쌀 보내기 운동, 2004년 룡천역 폭발사고 돕기 운동, 2006년과 2008년 식량과 생필품 보내기, 2008년 7월부터 중점사업으로 ‘국수 한 그릇 나누기 운동’을 벌여서 모두 21차례의 밀가루 지원 활동(3억3천만 원)을 하였다. 그 밖에 경운기와 선교차량 지원사업, 잔디 종자와 잔디깎기 지원, 칠골교회 개보수 작업 지원 등을 해왔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5.24조치와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UN을 통한 미국의 대북제재로 인해 남북교류의 길이 막히고, 이와 함께 모금 활동도 진척되지 않는 현실이다. (기장 평화공동체운동본부 사무국 정리)

지난 이십여 년 동안 교단적 활동으로서의 대북지원 사업은 교인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 활동에 제약이 있었던 것은, 단지 외부적인 환경의 어려움(이명박 정부의 5.24조치, UN을 통한 미국의 제재)뿐만 아니라, 지원사업 자체의 ‘시혜적’ 성격이 지역

교회, 또 그 구성원으로서의 교우들의 관심과 협력을 얻어가지 못한 한계를 가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일방적인 ‘지원사업’에서 남과 북의 ‘협력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교류협력의 토대가 될 만한 사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2012년 기장 총회에서 조그련과의 협력사업으로 제안되었고 일부 진행되었으나 남북경색으로 인해 중단된 ‘북녘 생명평화의 숲 가꾸기’ 사업이 그것이다. 1개 노회(연회)가 북의 1개 군에 종묘장(2~5억 원 규모)을 짓고, 교류의 빚장이 열리면 각 교회 신도회가 함께 농활/임활을 가서 북녘 산을 가꾸는 일을 하는 꿈을 꾀다. 북측이 요청하는 온실 농업을 통한 고부가가치 작물 재배 지원, 농업실습장을 통해 종자와 미생물 퇴비 등 농업정보와 기술지원에 관한 협력활동을 위해서 농촌지역 교회의 지혜가 쏟아져도 좋겠다. 남과 북이 농산물 생산-판매의 순환구조를 갖는 협동조합을 함께 만드는 꿈을 꾸는 것은 어떤가? 그래서 ‘평화가 밥이요, 밥이 통일’이라는 믿음이 실제로 구현되어, 신앙공동체의 물질-영적 자산이 한반도 선교를 통해서 생산-축적되는 구조도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에큐메니컬 교단은 ‘도잔소 프로세스’와 ‘한반도에큐메니칼포럼’(EFK)을 통해 북의 교회와 신뢰 관계를 유지해왔다. 기장 교단은 ‘6.15공동선언’의 뜻을 따라 2003년부터 금강산(2004~7년)과 평양(2008년, 2011년, 2014년)에서 공동기도회를 가졌고, 2006년부터는 남측 주체로 NCKK를 세워서 대북 교류 협력의 관계를 확산하였다. 최근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거의 모든 길이 막히고 말았는데, 교회가 나서서 새로운 돌파구를 만드는 창조적이고 과감한 운동을 펼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거기에서 시대적 사명과 역할을 찾을 수도 있다. 서울에서만 아니라, 권역-지역별로 자기 주도적 역할을 찾는 것이 좋겠다.

4. 남북교류협력 통한 한국교회 ‘선교 3.0운동’

한때 개신교회는 그 가치를 인정받으며 한국 사회에서 의미 있는 종교로 성장할 수 있었다. 기독교 복음이 사회적으로 의미와 필요성을 획득했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시기를 가리켜 ‘전도선교’의 시기라 하자 (선교 1.0운동 시대). 하지만 교회가 근본주의 신학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고 정신지체를 거듭하며 복음의 좌표를 잃자, 교회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사회참여를 통해 복음을 새롭게 정립하려는 흐름이 형성되었으나, 대부분의 교회는 ‘해외 선교’에서 종교적 열정의 활로를 찾고 교회의 내적 문제와 한계를 외부적 헌신을 통해서 해소하려 하였다. (선교 2.0운동 시대). 하지만 이제는 그 시대마저 저물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교회의 동력 자체가 생산되지 않는 때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선교 패러다임이 변하지 않고서는 쇠락의 길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오늘 한국교회는 분단시대의 증오와 대립을 부추기는 시대적 적폐가 되고 말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대부분 교단이 근본주의 신학으로 미끄러져 동성애와 이슬람에 대한 혐오 담론에 발목이 잡혀 있다. 그러나 혐오 담론은 윤리를 가장한 지배이론이지, 성서의 뜻을 펼쳐

낼 복음의 그릇이 될 수 없다. 이 모든 것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한국교회의 현실을 반영한다.

그렇다고 돈이 주도하는 산업 문명에 편승하여 목숨을 연명하는 것을 예수의 길이라고 할 수 있을까? 교회는 어떻게 하든지 평화의 영성과 상상력을 길러내면서 이 위기의 시대를 이겨내야 한다. 냉전체제의 골짜기였던 한반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우리 시대 문명의 문제를 풀 열쇠를 마련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일에 교회가 참여할 수는 없을까? 그것이 한반도에 예수의 종교가 존재하는 이유가 되었으면 한다. 힘겨운 현실로 인해 비틀거릴지라도 평화를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

아래로부터 동력을 가진 한국교회 평화운동, 지역화된(localized) 화해와 통일 선교를 새로운 모델로 삼아 한국교회의 '선교 3.0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어떠한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인한 세계적 고통은 변화를 위한 계기와 의미를 준다. 그것은 지난 한 세대 동안 진행된 경제 주도의 세계화(globalization) 과정이 빚어낸 삶의 방식으로부터의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코로나 사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행위규범'으로서의 뉴노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체제구상'으로서의 뉴노멀을 상상하는 일이다. 성서의 종말론적(전복적) 상상력이 필요하다! 신자유주의적 약탈 경제에서 벗어나 세계 시민주의적 관계로 도약할 길에 대한 모색은 분단체제를 극복하고 화해통일의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한국교회의 선교와 연결되어야 한다. 그 커다란 비전을 다시 세우면서 한국교회 '선교 3.0운동'을 벌여나가야 한다.

기독교의 선교는 외적인 활동만이 아니라 내적 고백에서 비롯되는 운동이다. 그리스도의 교회라면 그리스도의 정신을 추구하는 공동체여야 한다. 그러나 신앙공동체가 활력을 잃어가는 동안 한국교회의 얼굴은 배타와 혐오로 변모하였고, 그 착시효과로 말미암아 마치 오늘의 기독교인은 혐오와 배타의 논리를 가져야만 한다는 심리에 문힐 때도 있다. 분단체제의 한계상황에서 빛어지는 한계이자 비극이다. 하지만, 우리 시대가 아직 풀지 못한 문제가 있다면 일단 한계 그대로 남겨두자. 먼저 신앙의 양심과 상식에 따라 '사랑과 평화'의 복음을 작동시켜보자. 기독교 선교의 '3.0운동' 시대를 열기 위해, 당위를 넘어 동경으로 구성된 복음의 부름을 입고, '비판과 저항'만이 아닌 '대안을 실험'하는 교회와 신앙인을 길러낼 수 있도록 독려해가자.